

영상 · 사진보도와 초상권 침해



언론중재위원회는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양평 대명리조트에서 “영상·사진보도와 초상권 침해”라는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권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면서, “오늘 이 기회를 빌려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의견들이 우리가 향후 지켜야 할 지침의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1주제에서는 손영준 교수(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서울 제3중재부)가 “언론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본 초상권 침해 현황 및 특징”을 발표했다. 손 교수는 언론인의 교육기회 부족, 언론의 취재 제작 관행, 매체의 증가와 시민의 권리인식 강화 등 언론 제도·환경의 문제로 인해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인 한은경 교수(성균관대 신문방송학, 서울 제2중재부)는 과거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했으나 지금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초상권 문제는 언론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만 부회장(한국사진기자협회)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취재 여건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줄 것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초상권 관련 사건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2주제에서는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올바른 보도 방법 고찰”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초상권의 개념과 내용,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과 구제수단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올바른 보도방법을 위한 가이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인 김정탁 교수(성균관대 신문방송학, 서울 제6중재부)는 범죄 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는 인격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흉악범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도윤 부장(CJ E&M 법무팀)은 방송제작상 겪었던 고충과 주의점 등을 전하면서, “언론조정절차가 언론과 인격권의 조화를 위해 힘쓰며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세미나에서는 유럽언론평의회연맹(AIPCE) 연례회의에 참석한 정학철 부위원장과 김정숙 중재위원(대구중재부)이 관련 내용과 유럽의 언론평의회 동향을 소개했으며, 중재위원 및 언론인, 교수 등 7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